

수원지방법원 2021. 7. 8 선고 2021가단517687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수원지방법원 2022. 6. 16 선고 2021나84416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 7. 8 선고 2021가단517687 판결

전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유

담당변호사 여봉열

피 고 1. 주식회사 B

2. C 주식회사

3. D 주식회사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광진

변 론 종 결 2021. 6. 17.

판 결 선 고 2021. 7. 8.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주위적 청구취지

선택적으로,

가. 주식회사 E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2018. 11. 26.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 피고 D 주식회사는 피고 주식회사 B에게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9. 2. 28. 접수 제2941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2) 피고 주식회사 B는 피고 주식회사 C에게 위 등기소 2019. 2. 28. 접수 제2941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3) 피고 C 주식회사는 피고 주식회사 B에게 위 등기소 2018. 12. 7. 접수 제20307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4) 피고 주식회사 B는 주식회사 E에게 위 등기소 2018. 12. 7. 접수 제20307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

또는,

가. 주식회사 E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2018. 11. 26.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D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E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예비적 청구취지

가. 주식회사 E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2018. 11. 26. 체결된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130,893,000원과 그 중 130,000,000원에 대하여 2018. 2. 1.부터 2018. 11. 3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는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
소한다.

나. 피고 주식회사 B와 피고 D 주식회사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130,893,000원과 그 중
130,000,000원에 대한 2018. 2. 1.부터 2018. 11. 3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및 위 원리금 합계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주식회사 E에 대한 채권

원고는 2017. 11. 20.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와 사이에 위 회사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지상에서 진행하는 ‘F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에 관한 홍보관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8. 1. 5.경 홍보관 공사를 완료하였다. 원고는
E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 받지 못하자 E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20. 7. 14.경
법원으로부터 ‘E는 원고에게 130,893,800원 및 이 중 130,000,000원에 대하여 2018. 2. 1.부터
2018. 11. 30.까지 연 6%, 그 다음날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E의 이 사건 부동산 등에 대한 양수도계약 체결 및 소유권이전등기 경로1) E는 2018. 8. 31.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에게 공사금액을 28,964,200,000원을 정하여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공사를 도급하였고, 같은 날 H조합 외 9개 금융기관으로부터 160억 원을 대출(이하 ‘브릿지
대출’이라고 한다) 받아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인들에게 매매 잔금을 지급하였으며, G는 시공사로서
위 브릿지 대출금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을 하였다.

2) 같은 날 E와 G은 부동산 및 사업권 양도·양수계약서(이하 ‘이 사건 부동산 및 사업권 양수도계약’이라고 한다) 및 사업시행권포기각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양도할 목적물)

갑(= E)이 을(= G)에게 양도할 목적물은 다음과 같다.

1. 별첨 목록 기재 부동산(= 이 사건 각 부동산)
2. 갑이 소유하고 있는 사업권 일체
3. 갑이 소유하고 있는 사업허가서 관련 일체
4. 갑이 소유하고 있는 본 사업과 관련된 기타 권리 일체

제3조(양도가액)

1. 제2조 1항 별첨 목록 기재 부동산 매매가액은 160억 원으로 한다.

제4조(대금지급방법)

1. 제3조 1항의 매매대금은 을이 갑을 위하여 1. H조합, --- 중간 생략 ---, 10. I(주) 총 10개 금융기관으로부터 브릿지 대출의 연대보증금액 160억 원을 승계하는 것으로 을이 갑에게 지급하여야 할 매매대금에 갈음한다.

제7조(채무인수)

갑이 본 사업을 위하여 제4조 제1항에 적시된 금융기관 총 10개 은행으로부터 브릿지 대출을 약정서 상 상환기일(대출 실행일로부터 3개월)에 상환을 하지 못하거나 갑이 상환기일 내 이자 납입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조기 상환해야 하는 경우 갑은 즉시 제2조 양도할 목적물을 을에게 양도하고, 을이 상기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인수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양수인의 명의)

제2조 양도할 목적물의 양수인은 을 또는 을이 지정하는 자 명의로 할 수 있다.

제9조(채무의 책임한계)

을 또는 을이 지정하는 자가 갑으로부터 제3조 양도할 목적물을 양수받음에 있어 본 계약의 적시된 채무 외 기타 채무에 대해서는 갑의 책임으로 변제하여야 한다.

3) E는 2018. 8. 31. 피고 C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J이다. 이하 ‘피고 C’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브릿지 대출의 대주단, G 등을 우선수익자로 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18. 9. 3. 피고 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8. 31.자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E와 피고 B의 매매계약 체결

1) 그런데 E가 PF 대출을 받지 못하여 브릿지 대출금을 변제기까지 상환하지 못하게 되자, G은 이 사건 부동산 및 사업권 양수도계약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과 사업권을 양수하기 위하여 양수인을 피고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K이다. 이하 ‘피고 B’라고 한다)로 지정하였고, 그에 따라 E와 피고 B는 2018. 11. 26.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E는 위 매매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2018. 12. 6.자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8. 12. 7. 접수 제203072호로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2018. 12. 7. 피고 B에게 2018. 11. 2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위 등기소 접수 제20307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그 후 피고 B는 2018. 12. 7. 피고 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2. 6.자 신탁을 원인으로 같은 등기소 접수 제20307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피고 D 주식회사의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는 2019. 2. 28.자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9. 2. 28. 접수 제29413호로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L조합 등 대주단을 우선수익자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9. 2. 28. 피고 D에게 2019. 2. 28.자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같은 등기소 접수 제29414호로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 내지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주위적 청구

채무자 E와 피고 B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수익자 및 전득자인 피고들은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채무자인 E에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청구취지와 같이 순차적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또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청구

채무자 E의 책임재산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아닌 부동산담보신탁계약으로 인한 수익권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은 E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담보신탁계약 상 수익권을 처분한 것이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담보신탁계약 상 수익권의 평가금액은 최소 68억 7,000만 원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인 130,893,000원과 그 중 130,000,000원에 대하여 2018. 2. 1.부터 2018. 11. 3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와 전득자의 채권자에 대한 가액배상의무는 부진정연대채무이므로 피고 B와 피고 D은 각자 원고에게 위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보전채권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는 E에 대하여 130,893,000원과 그 중 130,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이 있고, 이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사해행위 판단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이 사건 부동산 및 사업권 양수도계약 체결 전에 성립된 것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다. 이 사건에서 사해행위 판단의 대상과 시점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사해행위의 판단 역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구체적 판단

가) 관련 법리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행위를 한 경우에는 채권자취소권에 관하여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을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일련의 행위들을 하나의 행위로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로서 사해성이 있는지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행위의 상대방의 동일성, 각 재산행위의 시간적 근접성, 채무자와 상대방의 관계, 행위의 동기 내지 기회의 동일성 여부 등을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15387 판결, 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5다223480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E는 브릿지 대출에 대하여 G의 연대보증을 받기 위하여 G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및 사업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E가 변제기 내에 브릿지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위 양수도계약에서 약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을 G이 지정한 자에게 양도하기 위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②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이 사건 부동산 및 사업권 양수도계약에 정한 바에 따라 G이 지정한 피고 B이고, 피고 B는 G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과 사업권을 양수받게 되자 2018. 12. 18. 주식회사 K에서 주식회사 B로 상호를 변경하고 부동산 개발업 등을 사업 목적으로 추가하는 등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만들어진 특수목적법인이므로 실질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 및 사업권 양수도 계약의 당사자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같다고 보아야 한다.

③ 이 사건 부동산 및 사업권 양수도계약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을 특정하는 핵심적인 요소인 매매대상, 매매금액, 매매 당사자, 매매대금 지급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하였거나 특정할 수 있는 기준이 정하여져 있다.

다) 위와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부동산 및 사업권양수도 계약의 이행행위에 불과하거나 그와 일련의 행위로서 동일한 법률행위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에서 사해행위의 존재 여부는 이 사건 부동산 및 사업권 양수도 계약과 그 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 및 사업권 양수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핀다.

라.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채무자 E는 사업부지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구입하는 등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하였고, 그에 따라 브릿지 대출을 받아야 했으며, 브릿지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G의 연대보증이 필요하였고, 그 연대보증을 위하여 G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및 사업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한 것인 점, 채무자 E는 이 사건 부동산 및 사업권 양수도계약의 체결 및 G의 연대보증을 통하여 이 사건 브릿지 대출을 받게 되었고 그 자금으로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수적이었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잔금을 지급하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던 점, 채무자 E는 당시 M증권으로부터 460억 규모의 PF 대출을 받아 브릿지 대출금 상환 및 사업자금을 마련할 계획이었고 실제로 PF 대출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였던 점, 만약 브릿지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도 이루어지기도 어려웠을 것이고 나아가 PF 대출을 받는 것도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PF 대출 후 원고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하는 것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처음부터 채무자 E가 자력으로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 아니라 일련의 이 사건 부동산 및 사업권 양수도계약, 브릿지 대출에 관한 계약, 대주단에 대한 담보신탁계약 등을 통하여 융통한 자금으로 취득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전체적인 취득 과정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채무자 E가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처분하였다는 것만을 분리하여 사해행위성을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도 없는 점(대법원 2012. 10. 11.자 2010마2066 결정 등 참조)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 및 사업권 양수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마. 소결론

결국 채무자 E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 B, C, D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 C, D 대한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식

별 지

부동산 목록

1.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N 대 184.1㎡
2.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O 대 230.6㎡
3.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P 대 136㎡
4.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Q 대 135.5㎡
5.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R 대 987.2㎡ "끝"

